

## 01 정치와 법

본문 11~1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④	3 ①	4 ④	5 ③
	6 ⑤	7 ⑤	8 ⑤		
(기출 플러스)	01 ④	02 ④			

##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본문 20~2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⑤	3 ⑤	4 ④	5 ⑤
	6 ③				
(기출 플러스)	01 ①	02 ②			

##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본문 29~3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6 ②	07 ③	08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③	3 ③	4 ④	5 ①
	6 ③	7 ③	8 ⑤		
(기출 플러스)	01 ①	02 ①			

## 04 정부 형태

본문 38~42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①	03 ②	04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⑤	5 ④
	6 ②				
(기출 플러스)	01 ④	02 ①			

##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본문 47~54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②	3 ③	4 ④	5 ③
	6 ④	7 ③	8 ②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②	03 ③	04 ⑤	

## 06 지방 자치

본문 57~60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③	03 ①	04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①	3 ②	4 ②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③			

## 07 선거와 선거 제도

본문 64~71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③	3 ④	4 ④	5 ⑤
	6 ⑤	7 ②	8 ④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⑤			

##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본문 76~81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⑤	03 ④	04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③	3 ③	4 ①	5 ⑤
	6 ③	7 ①	8 ②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①			

## 09 민법의 기초

본문 84~89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⑤ 3 ② 4 ④ 5 ②  
6 ④

(기출 플러스) 01 ③ 02 ④

## 10 재산 관계와 법

본문 94~101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③ 07 ②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④ 3 ① 4 ④ 5 ④  
6 ⑤ 7 ④ 8 ④

(기출 플러스) 01 ③ 02 ③ 03 ③ 04 ②

## 11 가족 관계와 법

본문 106~113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④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④ 08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④ 3 ⑤ 4 ③ 5 ③  
6 ① 7 ③ 8 ⑤

(기출 플러스) 01 ① 02 ① 03 ④ 04 ④

## 12 형법의 이해

본문 118~124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③ 08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① 3 ② 4 ② 5 ③  
6 ④ 7 ⑤ 8 ④

(기출 플러스) 01 ④ 02 ③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본문 129~136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② 03 ⑤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⑤ 3 ① 4 ③ 5 ②  
6 ④ 7 ① 8 ⑤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⑤ 03 ⑤ 04 ⑤

## 14 근로자의 권리

본문 139~144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②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⑤ 3 ③ 4 ⑤ 5 ⑤  
6 ④

(기출 플러스) 01 ⑤ 02 ⑤

##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본문 148~152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⑤ 03 ⑤ 04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② 3 ① 4 ① 5 ④  
6 ⑤

(기출 플러스) 01 ① 02 ③

##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본문 155~158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⑤ 03 ⑤ 04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④ 3 ③ 4 ①

(기출 플러스) 01 ④ 02 ⑤

# 01 정치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1~12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②

##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보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오답 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③ 국회의 법률 개정 과정은 두 관점 모두 정치로 본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학급 내 토론 과정을 통한 학급 규칙 개정을 정치로 본다.

## 02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는 철도 노선을 둘러싼 논쟁과 반려동물 쉼터 조성에 대한 찬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③ 제시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정치의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제시된 두 사례에서 권력의 감시 및 견제, 사회의 발전 방향 제시,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 설정, 구성원들의 반사회적 행위 통제를 공통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 03 법의 이념 이해

**문제 분석**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A는 정의이다.

**정답 찾기** ③ 법의 내용이 옳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이념 중 정의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법의 이념 중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⑤ 법의 이념 중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04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 분석**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중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이다.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주의와 달리 근대 민주주의는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A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B는 현대 민주주의, C는 근대 민주주의이다.

**정답 찾기** ② 현대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공직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사회 계약설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민주제가 시행되었다.

⑤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모두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 05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근대 민주주의를 등장시킨 시민 혁명이다.

**정답 찾기** ㄱ, ㄴ, 시민 혁명으로 인해 등장한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세계 각국 여성들과 미국 흑인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에 존재하던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철폐되었다.

ㄹ, 추천제, 윤번제를 통한 시민의 공직 참여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 06 사회 계약설의 이해

**문제 분석**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이다.

**정답 찾기** ⑤ 홉스는 개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자기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고 절대 권력의 통치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홉스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② 홉스 등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았다.

③ 홉스는 사회 계약 이후 군주가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홉스는 권력 분립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를 주장하였다.

## 07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B는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나.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표적 실현 수단이다.

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오답 피하기** ㄱ. 통치의 실질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08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민주주의가 안정성을 유지해 줄 법치주의를 필요로 하고, 법치주의가 정당성을 확보해 줄 민주주의를 필요로 함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3~16쪽			
1 ⑤	2 ④	3 ①	4 ④	5 ③	6 ⑤
7 ⑤	8 ⑤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은 두 관점 모두 정치라고 보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보므로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 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③ 기업 내 노사 간의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 보는 관점이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보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 2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 따르면, 정치는 사람들 간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찾기** ④ 제시문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다툼과 혼란을 방지하는 정치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반사회적 행위 통제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 개선,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 설정을 통한 구성원들의 동참 유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 3 법의 이념 이해

**문제 분석** 법의 이념 중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되는 A는 정의, 형벌 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통해 도모하는 B는 법적 안정성이다.

**정답 찾기** ㄱ. 정의의 본질적 내용은 평등이다.

나. 법적 안정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ㄷ.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합목적성의 의미이다.

르. 법적 안정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 4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 분석** A는 근대 민주주의, B는 현대 민주주의이다.

**정답 찾기** ④ 근대 민주주의와 달리 현대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추천제 및 윤번제를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이다.

②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모두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였다.

③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모두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 5 시민 혁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이해

**문제 분석** 근대 시민 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으나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과 같은 한계도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민 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찾기** ③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며 전개한 차티스트 운동, 흑인들의 참정권 차별 반대 운동,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근대 시민 혁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시민들이 부당한 신분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근대 시민 혁명 당시의 모습으로서 근대 시민 혁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로는 부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을~정의 발표 내용은 근대 시민 혁명의 성과,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제 요소, 봉건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 6 사회 계약설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가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갑은 루소, 자연 상태가 법, 재판관, 판결을 집행할 힘이 없어 개인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고 본 을은 로크이다.

**정답 찾기** ⑤ 루소와 로크는 사회 계약 이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 분립을 강조한 것은 루소가 아니라 로크이다.

②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이다.

③ 루소, 로크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는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본다.

④ 사회 계약에 따른 정치 형태로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로크는 위임받은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에 의한 대의 민주제를 주장하였다.

## 7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자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모두 중시하므로, 전자보다 후자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닌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제한 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8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법이 지닌 엄격성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법률과 헌법은 조문이건 해석이건 변화하는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법률과 헌법의 특징인 엄격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법률과 헌법이 시민들을 억압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긴장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 법치주의의 확립이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01 ④

02 ④

## 01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까지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므로,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ㄱ.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므로,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ㄷ.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이다.

**오답 피하기** ㄹ.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이다.

## 02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 분석**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④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정치로 본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정치로 본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축구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 가입 조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해 나가는 것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20~21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③

## 01 헌법 의미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가)에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구분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만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 (나)에는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③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달리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가의 통치 조직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국가 권력 제한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한다.

④ 현대 복지 국가 헌법과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⑤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달리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02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헌법은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수권 기능을 한다.

**정답 찾기** ③ 제시된 헌법 조항들에는 국회 의원, 정부, 국무 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조직 수권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제시된 헌법 조항들을 통해 국가 창설의 토대, 사회 통합의 매개체 역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남용 방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같은 헌법의 기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 03 국민 주권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④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 제2항에 국민 주권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 민주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② 평화 통일 지향이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③ 국제 평화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⑤ 문화 국가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 04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는 자유주의이고,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는 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이다.

**정답 찾기** ㄱ. 권력 분립의 일환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ㄷ. 국민의 권리 제한 시 적법 절차의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ㄴ. 전문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 실현을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ㄹ. 소득 재분배를 통해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을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 05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 정부가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 및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정답 찾기**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② 국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헌법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이다.

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은 평화 통일 지향이다.

## 06 문화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①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에는 문화 국가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자유 민주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③ 국제 평화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⑤ 자유 민주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헌법 조항이다.

## 07 국제 평화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헌법 조항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 찾기** ③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 등의 국제 법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법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제 평화를 위한 국가 간 협의 시 각국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지만 침략에 맞서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지만 국내에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시 우리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 08 평화 통일 지향의 이해

**문제 분석** 남과 북이 하나의 핏줄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통해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평화 통일 지향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평화 통일 지향에 관하여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실현 방안으로 권력 분립 제도를 들 수 있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②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④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문화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가에 사회 보장 제도의 시행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2~24쪽

1 ④

2 ⑤

3 ⑤

4 ④

5 ⑤

6 ③

## 1 헌법 의미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C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고, A, B는 각각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④ 현대 복지 국가 헌법과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세 가지 헌법 모두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세 가지 헌법 모두 국가의 통치 조직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가)에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간다면, B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⑤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달리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 2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장 기능을 한다.

**정답 찾기** 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제시문을 통해 국가 창설의 토대,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절차 제공, 조직 수권, 권력 분립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와 같은 헌법의 기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전문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ㄷ. 헌법 전문의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에 나타난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ㄹ. 헌법 전문의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에 나타난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오답 피하기** ㄱ. 보통 선거에 바탕을 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제력 남용 행위 규제는 국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내용으로서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 4 복지 국가의 원리와 문화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갑, 병은 복지 국가의 원리, 을은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ㄷ.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ㄱ.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ㄷ. 교사가 세 명은 잘 설명했다고 하였으므로 정은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헌법 조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복지 국가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 규정에서 '음주 전후', '숙취 해소' 표시를 금지한 부분이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②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③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④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 6 평화 통일 지향과 국제 평화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평화 통일 지향, (나)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 찾기** ③ 평화 통일 지향, 국제 평화주의 모두 실현 과정에서 평화적인 수단의 활용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남북 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전쟁이 아닌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④ 평화 통일 지향은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이 반영된 원리이다.

⑤ 평화 통일 지향과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은 국제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을 이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 기출 플러스

본문 25쪽

01 ①

02 ②

## 01 국민 주권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A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헌법 개정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③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④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 02 국민 주권주의와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과 배려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따라서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②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③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수능 기본 문제

본문 29~30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6 ②

07 ③

08 ⑤

##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해

**문제 분석**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A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정답 찾기**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원리로서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자 한계가 된다.

ㄷ.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이며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받는다.

ㄷ.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 02 평등권의 이해

**문제 분석** 평등권은 법 앞의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 찾기** ②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달리 평등권과 자유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권리이다.

③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심화된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 03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갑은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고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③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 ④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이다.  
 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 04 참정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공무 담임권에 해당하는 공직 취임권, 을은 국민 투표권, 병은 공무 담임권에 해당하는 피선거권을 행사하였다. 갑~병이 행사한 권리가 속하는 기본권 유형은 참정권이다.

**정답 찾기** 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 ② 참정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③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는 행복 추구권이다.

## 05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①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참정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다.

- ③, ④ 자유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다.  
 ⑤ 청구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다.

## 06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제26조 제1항은 청원권, 제27조 제1항은 재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은 모두 기본권 유형 중 청구권에 속한다.

**정답 찾기**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불합리한 차별 금지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 ③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④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 07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사회권과 달리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③ 적극적 성격의 사회권과 달리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이다.

②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④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08 기본권의 제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ㄷ.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ㄹ.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한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오답 피하기** ㄱ.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목적에 어긋나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ㄴ. 기본권 제한 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 요건에 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1~34쪽		
1 ④	2 ③	3 ③	4 ④	5 ①	6 ③
7 ③	8 ⑤				

## 1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유형 A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②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⑤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 2 평등권과 참정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평등권, (나)는 참정권이다.

**정답 찾기** 나. 평등권은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다. 참정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기본권이다.

**오답 피하기** 그.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리.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 3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A는 자유권,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 B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③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② 사회권과 달리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④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국가의 급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로 분류된다.

### 4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노령 수당 지급, 유족 급여 및 장례 비용의 지급은 모두 사회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⑤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 5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기본권인가?'라는 질문에 참정권과 달리 사회권과 청구권의 답변은 '아니요'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에 청구권과 달리 참정권과 사회권의 답변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A는 참정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①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에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에 포함된다.

③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포함된다.

④ 참정권,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⑤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적극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며,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진 권리는 자유권이다.

### 6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카드 3]은 사회권, 청구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카드 4]는 사회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카드 5]는 사회권과 청구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카드 6]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적혀 있다. 카드를 뽑아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은 '[카드 1]의 점수+3점', 올은 '[카드 2]의 점수+4점', 병은 '4점'을 기록하였다.

**정답 찾기** ③ (나)에 세 가지 기본권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성격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가 들어가면 [카드 2]를 뽑을 경우 3점을 받게 된다. 교사의 마지막 발언에 따르면 올의 점수는 갑의 점수보다 낮아야 하는데, 올의 점수는 7점이 되고 갑의 점수의 최댓값은 6점이 되므로 이 성격의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카드 3], [카드 5] 모두 사회권과 청구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적혀 있어 2점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② (가)에 자유권에 해당하는 성격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가 들어가면 [카드 1]을 뽑을 경우 1점을 받게 된다. 결국 [카드 1]을 뽑은 갑의 점수는 올의 점수보다 낮고 병의 점수와 같게 되는데, 이는 갑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교사의 마지막 발언과 모순이 된다.

④ (나)에 자유권에 해당하는 성격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가 들어가면 [카드 2]를 뽑을 경우 1점을 받게 되므로, 올의 점수는 6점이 아니라 5점이다.

⑤ [카드 3], [카드 4], [카드 6] 중에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성격이 적힌 카드가 없다.

### 7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 B, C는 각각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③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국가에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8 기본권의 제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답 찾기** 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르.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헌법 재판소는 성비 불균형 해소 및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대상은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었다.

## 기출 플러스

본문 35쪽

01 ①

02 ①

### 01 참정권의 이해

**문제 분석** 참정권은 선거권과 공무 부담권을 포함하며,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A는 참정권이다.

**정답 찾기** ① 기본권 유형 중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④ 기본권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⑤ 제시문에 따르면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갖는 국가 내적 권리이므로 국가의 창설과 함께 규정된 바에 따라 형성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정권이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2 평등권과 청구권의 이해

**문제 분석**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국가 작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고, 기본권 침해 시 국가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A는 평등권, B는 청구권이다.

**정답 찾기** ①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오답 피하기** ②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③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

④ 평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절차적 권리이다.

⑤ 모든 기본권은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있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04 정부 형태

수능 기본 문제

본문 38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⑤

### 01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이해

**문제 분석** 의회가 불신임 투표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내각)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 02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 수반 역할만 담당하고 국가 원수가 별도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ㄱ.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수반을 겸직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의원 내각제에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되기도 한다.

### 03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대통령제, ‘아니요’라고 답하면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②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B가 의원 내각제라면 ㉠은 ‘아니요’이다.

**오답 피하기** ①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A가 의원 내각제라면 ㉠은 ‘아니요’이다.

③ ㉠이 ‘아니요’라면 A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

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이 ‘예’라면 B는 대통령제이다. 내각이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며,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04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에서 국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에서 국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으며, 이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9~41쪽

1 ② 2 ⑤ 3 ④ 4 ⑤ 5 ④ 6 ②

### 1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정답 찾기** ㄱ.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의회 의원은 행정부 수반을 겸직할 수 있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ㄴ.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행정부 수반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의석수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은 경우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한다.



## 2 전형적인 정부 형태 및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정부 형태 A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제이다. 정부 형태 B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므로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직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④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 3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모두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대통령제이며, (가)에는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의원 내각제이며, (나)에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④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모두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4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권한인 (가), (나)를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ㄷ. (나)에 '의회 해산권'이 들어간다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 시기에 B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인 ㉠은 B당이다.

ㄹ. T 시기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B당이 있음에도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이라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오답 피하기** ㄱ. (가)에 '내각 불신임권'이 들어간다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ㄴ. (나)에 '법률안 거부권'이 들어간다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없다.

## 5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선택한 카드 내용에 따라 깃발이 이동하므로 카드에 적힌 정부 형태의 특징과 깃발의 이동 위치에 따라 A, B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카드(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두 번째 카드(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모두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세 번째 카드(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며, 네 번째 카드(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답 찾기** ㄱ. 첫 번째 카드 선택 후 깃발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B에서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이 경우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선택으로 깃발은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며, 세 번째 카드 선택으로 깃발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에 위치한다.

ㄹ.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는 대통령제 특징, 세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는 의원 내각제 특징에 해당하여 깃발은 결국 원래 자리인 ㉠에 위치한다.

**오답 피하기** ㄷ. 세 번째 카드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깃발이 이동한다. 반면, 네 번째 카드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깃발이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카드까지 선택했을 때와 네 번째 카드까지 선택했을 때의 깃발 위치는 같을 수 없다.

## 6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 것,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것,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3점을 얻은 학생이 2명이라는 조건을 통해 A가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A가 의원 내각제라면 1명(병)만 3점을 얻는다.

**정답 찾기** ② A는 대통령제이므로 3점을 얻은 학생은 2명(갑, 무)이다.

**오답 피하기** ① A가 대통령제이므로 을은 0점을 얻는다. 4점을 얻은 학생은 정이다.

③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⑤ 의회 해산으로 인한 조기 총선거 실시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 기출 플러스

본문 42쪽

01 ④

02 ①

## 01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의 행정부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 □부 장관도 의회에서 법률안 가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는 내용을 통해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한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② 대통령제에서 국민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02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이해

**문제 분석** t+1대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형태가 변경되었는데 t+2대에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였으므로, □ □국의 정부 형태는 t+2대에 의원 내각제이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제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 갑이 소속된 정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t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행정부 수반 갑의 임기 중 3년 차가 시작되는 날 동시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갑의 임기 중 1년 차에는 갑이 소속된 정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t+2대에 □ □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병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③ 행정부 수반 갑이 B당 소속이므로 t대 의회 의원 임기 3년 차까지 A당은 야당이다. 이후 새롭게 선출된 행정부 수반 을의 소속 정당이 원내 과반을 유지하다 t+1대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을의 소속 정당은 A당이다. 따라서 t대 의회 의원 임기 4년 차에는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므로 A당은 여당이다.

④ t+1대에 □ □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을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 t+2대에 □ □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수능 기본 문제

본문 47~48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①

## 01 국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는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및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가 가진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긴급 재정부·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④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 02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소원 심판권을 가지는 A는 헌법 재판소이고, 헌법 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B는 국회, C는 대통령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③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④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 03 국회와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이며, ㉠에는 국회가 헌법 재판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헌법 재판소는 국가 기관 상호 간 권한의 다툼 등을 심판하는 권한 쟁의 심판권을 가진다.

㉣.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오답 피하기**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이 행정부(대통령)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에 들어갈 수 없다.

## 04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따라서 A는 국무총리, B는 대통령이다.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C는 국무 회의, D는 국무 위원이다.

**정답 찾기** ④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을 가진다.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국회 및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05 우리나라 법률 제·개정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옳이 옳지 않은 대답을 하였으므로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ㄷ. 옳은 옳지 않은 대답을 하였으므로 옳은 대답을 한 사람은 갑, 병이다.

ㄹ.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국회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 의장은 이를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며,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 06 사법권의 독립 이해

**문제 분석**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데, 이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고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ㄹ.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ㄷ.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를 확보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 07 대통령 및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며,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A는 대통령, B는 감사원이다.

**정답 찾기** 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②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③ 대통령과 감사원장 모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08 헌법 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에 반하는 법률 조항이나 공권력 행사 등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 재판이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①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오답 피하기** ②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③ 헌법 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 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⑤ 헌법 재판소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49~52쪽			
1 ③	2 ②	3 ③	4 ④	5 ③	6 ④	
7 ③	8 ②					

## 1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이해

**문제 분석** 갑의 상고를 기각한 A는 대법원이다. 갑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가)는 헌법 소원 심판이며, B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③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소원 심판은 법원이 청구할 수 없다.

④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2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국민 투표를 포함하고 있는 (가)는 헌법 개정 절차이고, (나)는 법률 제·개정 절차이다.

**정답 찾기** ②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헌법 개정 절차, (나)는 법률 제·개정 절차이다.

③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률안 제출을 위해서는 국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 단체를 구성한다.

## 3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갑, 을의 답안 내용과 점수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기관 A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 기관 간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의 유무 및 범위를 결정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헌법 재판소가 가진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소송의 재판권은 모두 대법원이 가진다.

**정답 찾기** ③ ㉠이 '3점'이라면 A는 대법원이며, (가)에는 대법원에 대한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대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가 헌법 소원 심판권을 가진다면 A는 헌법 재판소이며, 갑의 첫 번째, 세 번째 답안 내용이 맞으므로 ㉠은 '2점'이다.

② ㉠이 '2점'이라면 A는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아

니다.

④ ㉠이 '2점'이라면 A는 대법원이며, (가)에는 대법원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A가 헌법 재판소인 경우, A가 대법원인 경우 모두 ㉠과 ㉡의 합은 (가)의 내용에 따라 최대 3점이 될 수 있다.

## 4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제척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수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관을 자동으로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직무 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찾기** ④ 제척, 기피, 회피 모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척, 기피, 회피가 법관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② 제척, 기피, 회피가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③ 제척, 기피, 회피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⑤ 제척, 기피, 회피가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에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있다.

## 5 국회의 구성과 입법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 가능성, 교섭 단체 구성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③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C당 의원 전원만 불출석한 경우 출석 의원은 총 262명이다. 이 중 B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133명 찬성)하면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므로 해당 법률안은 의결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A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단독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②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D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20명이 되지 않으므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A당, C당, D당 소속 의원 167명이 찬성하더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므로 해당 법률안은 재의결될 수 없다.

⑤ 자료에서 A당과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선거 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 6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조약 체결·비준권을 가진 A는 대통령,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B는 국무 회의이다. 중요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C는 국회이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하는 D는 국무총리이다.

**정답 찾기** ④ 국회는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②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다.

⑤ 국회, 국무총리 모두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7 법원과 헌법 재판소 이해

**문제 분석** 갑의 항소심을 담당한 A는 2심 법원이며, 상고심을 담당한 B는 대법원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는 헌법 소원 심판,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③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관할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상고심을 담당한 B는 대법원이다.

② 대법원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⑤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것으로 합헌이라 판단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해당 법률 조항이 갑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회는 재판관 3인 선출권으로 헌법 재판소를 견제할 수 있으므로 갑이 옳은 대답을 하였다면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으므로 을이 옳은 대답을 하였다면 C는 대통령이며, A는 국회이다.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으므로 병이 옳은 대답을 하였다면 D는 법원이며, B는 국회이다. 그런데 병이

옳은 대답을 한 경우 B가 국회이므로 갑, 을은 모두 옳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되어 3명이 옳은 대답을 하였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옳지 않은 대답을 하였고,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 C는 대통령, D는 법원이다.

**정답 찾기**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권한 쟁의 심판권을 가진다.

③ 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나, 헌법 재판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는 없다.

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권을 가지며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다. 정은 옳은 대답을 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기출 플러스

본문 53~54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⑤

## 01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법 시행령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병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답 찾기** ㄷ. 갑과 병은 모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오답 피하기** ㄱ.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ㄴ.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 시행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 02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대법원, D는 헌법 재판소, E는 감사원이다.

**정답 찾기** ②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관할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가지며,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④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⑤ 국회는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 03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국무총리, D는 헌법 재판소, E는 대법원이다.

**정답 찾기** ③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국회는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⑤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 04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갑의 상고심을 기각한 A는 대법원이고, 헌법 소원 심판권을 가지는 B는 헌법 재판소이다. 을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C는 법원이다.

**정답 찾기** ⑤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을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하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 갑은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지만 대법원의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③ 을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법 조항이 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④ 갑과 을 모두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 06 지방 자치

수능 기본 문제

본문 57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④

### 01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가진 A는 지방 의회이고,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가진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정답 찾기** ①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오답 피하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가지는 권한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예산 심의·확정권'은 지방 의회가 가지는 권한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02 주민 투표 제도와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주민 투표 제도, (나)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이다.

**정답 찾기** 나. 주민 투표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 자치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다.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공익을 저해하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지방 의회가 조례 제정 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기 중에 해임하기 위해서 주민은 주민 소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03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도는 광역 자치 단체이며, 갑은 지방 의회 의원이고, 을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정답 찾기** ① ○○도지사인 을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서 ○○도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오답 피하기**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③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모두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④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⑤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임기는 각각 4년이다.

### 04 주민 조례 발안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답 찾기** 가. 주민 조례 발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지방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

나. 지방 의회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다.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 조례 청구는 주민 참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르.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지방 의회와 행정 안전부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8~59쪽

1 ① 2 ① 3 ② 4 ②

### 1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고유 권한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진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B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 찾기** ①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② 지방 의회가 ○○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는다.

③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가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은 ○○ 조례안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가진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조례 제정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 2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인 A는 지방 의회이고, 지

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정답 찾기** ①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견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장도 임기 중에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법을 개정할 수 없다. 법률의 제·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⑤ 헌법 재판소는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지방 의회 의원의 재임을 3기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3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교육감 이해

**문제 분석** ○○시는 기초 자치 단체이고, △△도는 광역 자치 단체이다. 교육감은 광역 자치 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기관이다.

**정답 찾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 제출권을 가지므로 ○○시장은 ○○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조례안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확정되며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 자치 단체장이다.

⑤ ○○시장, △△도지사, △△도 교육감 모두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4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조정하는 제도인 (가)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B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 찾기** 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나.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오답 피하기** 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이 없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기출 플러스

본문 60쪽

01 ② 02 ③

### 01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B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 찾기**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⑤ 지방 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02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자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A는 지방 의회이고,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자치법에 따라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정답 찾기**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은 국회가 가진다.

② 주민은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은 지방 의회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64~65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④

## 0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동의의 절차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선거를 통해 다수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는 정해진 임기 동안에 국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제시문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② 여론을 형성하고 반영하는 것은 제시문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③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제시문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④ 정치 체도를 배우도록 하는 것은 제시문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 02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선거이고, 유권자 간에 존재하는 재산, 학력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표의 수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평등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① 인종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선거를 위반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②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직접 선거이다.

③ 기표소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비밀 선거를 위반한 사례이다.

④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비밀 선거이다.

⑤ A는 보통 선거, B는 평등 선거이다.

## 03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갑국의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 6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1인의 후보자가 당선된다. 최근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의석수	0	2	0	1	3	6
의석률	0	약 33.3	0	약 16.7	50	100
정당 득표율	약 16.1	약 21.1	약 17.8	약 19.4	약 25.6	100

선거구 1, 3, 5 각각의 총투표수를 100표로 가정하면, 선거구 2, 4, 6 각각의 총투표수는 200표가 된다. 예를 들어 A당의 득표수는 선거구 1에서 5표, 선거구 2에서 10표, 선거구 3에서 10표, 선거구 4에서 40표, 선거구 5에서 20표, 선거구 6에서 60표로 총 145표이다. 이때 A당은 전체 총투표수 900표에서 145표를 얻었으므로 정당 득표율은 약 16.1%가 된다.

**정답 찾기** ④ A당, C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통해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E당은 3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⑤ 의석률은 B당 약 33.3%, D당 약 16.7%이고, 정당 득표율은 B당 약 21.1%, D당 약 19.4%로 B당은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고, D당은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낮다.

## 4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의석수	1	1	1	1	2	6

**정답 찾기** ㄱ. 갑국은 개편안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통해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적용 시 A당 1석, B당 1석, C당 1석, D당 1석, E당 2석으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은 없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거구별 유권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평등 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5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최근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득표율	20	30	40	10	100
현행 의석수	2	3	4	1	10
현행 의석률	20	30	40	10	100
개편안 의석수	2	3	3	1	9

**정답 찾기** ㄱ.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은 A당 20%, B당 30%, C당 40%, D당 10%이며, 의석률은 A당 20%, B당 30%, C당 40%, D당 10%로 모든 정당이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였다.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는 A당 2석, B당 3석, D당 1석이며, 차기 선거에서 의석수는 A당 2석, B당 3석, D당 1석으로 A당, B당, D당의 의석수는 현재와 동일하다.

**오답 피하기** ㄴ. C당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석률은 40%, 개편안 적용 시 의석률은 약 33.3%로 개편안 적용을 반대할 것이다.

ㄷ. 현행과 개편안 모두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한 대표 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6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이해

**문제 분석** A는 선거구 법정주의, B는 선거 공영제이다.

**정답 찾기** ㄴ.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가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ㄷ. 선거 공영제는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를 보장한다.

**오답 피하기** ㄱ.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 공영제이다.

ㄷ. 선거 공영제가 후보자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7 대표 결정 방식 이해

**문제 분석** A는 단순 다수 대표제, B는 절대다수 대표제인 결선 투표제, C는 절대다수 대표제인 선호 투표제이다.

**정답 찾기** ① A와 C는 한 번의 투표로 대표자가 결정되어 투표 횟수가 같다.

**오답 피하기**

② B, C 모두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③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절대다수 대표제인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을 수 있다.

④ 절대다수 대표제인 결선 투표제는 투표를 2회 할 수 있어서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선거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⑤ 절대다수 대표제는 과반수 득표와 같이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에 부합해야 해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기만 하면 당선되는 방식인 단순 다

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8 우리나라 공직 선거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회 의원 선거, B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 C는 대통령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④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국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②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기초 자치 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이루어진다.

③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국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이다.

⑤ 국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4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한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6~69쪽

1 ①      2 ③      3 ④      4 ④      5 ⑤      6 ⑤  
7 ②      8 ④

## 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그림에 나타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책 결정자를 직접 선택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책 결정자를 국민이 직접 선택한다는 점을 통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표출하는 것은 그림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③ 정치 체도를 배우는 정치 교육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은 그림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④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그림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⑤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을 통해 정치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그림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 2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직접 선거, (나)는 비밀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③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은 보통 선거이다.

② 교육과 재산에 따라 1표 이상의 투표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평등 선거에 위반된다.

④ 선거구 간에 유권자의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평등 선거에 위반된다.

⑤ 직접 선거에 반대되는 것은 간접 선거, 비밀 선거에 반대되는 것은 공개 선거이다.

### 3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최근 갑국에서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선거구 당 2~3명씩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통해 중·대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사표의 수는 가 선거구에서 300표, 나 선거구에서 300표, 다 선거구에서 300표, 라 선거구에서 300표, 마 선거구에서 300표이다. 총 6,000표에서 1,500표의 사표가 나왔으므로 사표의 수는 총투표수의 25%이다.

르. 선거구 가~마에서 모두 당선자 간 득표수 차이가 있으므로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답 피하기** 가. 선거구당 2~3명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점을 통해 보통 선거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제○○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수의 차이가 없도록 총 10개의 선거구를 획정하였고, 10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1명씩 선출하였다. 그림에서 선거구별 당선된 정당을 표시한 결과를 통해 A당은 4석, B당은 5석, C당은 1석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각 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1명씩 선출한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르.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경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이면, A당 의석수는 4석, B당과 C당의 의석수 합은 6석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이면, C당 의석수는 1석, A당과 B당의 의석수 합은 9석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가. 선거구 간 유권자 수의 차이가 없도록 총 10개의 선거구를 획정하였다는 점을 통해 평등 선거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총의석수 10석 중에서 B당 의석수는 5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5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 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고 있고, 비례 대표 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지역구 의석수	120	20	20	10	30	200
비례 대표 의석수	40	30	8	10	12	100
총의석수	160	50	28	20	42	300
의석률	약 53.3	약 16.7	약 9.3	약 6.7	14	100

**정답 찾기** ⑤ B당 총의석수는 50석, C당 총의석수는 28석, D당 총의석수 20석으로 B당 총의석수는 C당과 D당의 총의석수의 합보다 크다.

**오답 피하기** ① 10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선출하는 의원 수를 같게 200명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하는 병립형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석 100석이 결정된다.

③ 각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득표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A당 총의석수는 160석, E당 총의석수는 42석으로 A당 총의석수는 E당 총의석수의 4배 미만이다.

### 6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지역구 의석수	120	20	20	10	30	200
병립형 비례 대표 의석수	20	15	4	5	6	50
준연동형 비례 대표 의석수	0	35	2	10	3	50
총의석수	140	70	26	25	39	300
의석률	약 46.7	약 23.3	약 8.7	약 8.3	13	100

**정답 찾기** 다. 정당 득표율은 A당 40%, B당 30%, C당 8%, D당 10%, E당 12%이다. 현행 선거에서 의석률은 A당 약 53.3%, B당 약 16.7%, C당 약 9.3%, D당 약 6.7%, E당 14%이고, 개편안 적용 시 의석률은 A당 약 46.7%, B당 약 23.3%, C당 약 8.7%, D당 약 8.3%, E당 13%로 현재에 비해 개편안 적용 시 모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의 절댓값이 줄어든 것이다.

ㄹ. 현재에 비해 개편안 적용 시 A당은 20석, C당은 2석, E당은 3석 줄어들고, B당은 20석, D당은 5석 늘어날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ㄱ. 현재 A당이 160석, 개편안 적용 시 A당이 140석이 되므로 현재와 달리 개편안 적용 시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ㄴ.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A당 20석, B당 20석, C당 2석, D당 5석, E당 3석 차이로 현재에 비해 개편안 적용 시 의석수가 가장 적게 변동할 정당은 C당이다.

## 7 우리나라 공직 선거 이해

**문제 분석** 선거 종류와 카드 내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카드 A	카드 B	카드 C	카드 D	카드 E	카드 F
국회 의원 선거(7점)	○ (1점)	X (0점)	○ (1점)	○ (2점)	○ (3점)	X (0점)
광역 의회 의원 선거(9점)	○ (1점)	○ (3점)	○ (1점)	○ (2점)	X (0점)	○ (2점)
기초 의회 의원 선거(4점)	○ (1점)	X (0점)	○ (1점)	X (0점)	X (0점)	○ (2점)

게임 결과 점수는 '갑>을>병'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갑이 선택한 (가)는 광역 의회 의원 선거, 을이 선택한 (나)는 국회 의원 선거, 병이 선택한 (다)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갑은 게임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므로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인 (가)를 선택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가장 높은 점수는 갑이 선택한 광역 의회 의원 선거로 9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병이 선택한 기초 의회 의원 선거로 4점이다.

③ (나)는 국회 의원 선거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다)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로 기초 자치 단체를 단위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⑤ 국회 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의회 의원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지방 선거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8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선거구 법정주의, B는 선거 관리 위원회, C는 선거 공영제이다.

**정답 찾기** ㄱ. 선거구를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제도는 선거구 법정주의이다.  
ㄴ.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선거 관리 위원회이다.

ㄷ.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도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는 선거 공영제이다.

**오답 피하기** ㄹ.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 보장에 기여한다.

### 기출 플러스

본문 70~71쪽

01 ② 02 ⑤

## 01 선거 제도 분석

**문제 분석** t 시기와 t+1 시기의 ○○ 단체 대표자 선거 후보자별 득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 시기 후보자별 득표 결과〉

(단위: 표)

구분	후보자 A	후보자 B	후보자 C	후보자 D
V1~V20	20			
V21~V40		20		
V41~V50		10		
V51~V80			30	
V81~V100				20
합계	20	30	30	20

〈t+1 시기 후보자별 득표 결과〉

(단위: 표)

구분	후보자 A	후보자 B	후보자 C	후보자 D
V1~V20	20			
V21~V40		20		
V41~V50				10
V51~V80			30	
V81~V100		20		
합계	20	40	30	10

**정답 찾기** ② t+1 시기 선거에서 후보자 A와 후보자 D는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였다. 후보자 A와 후보자 D를 지지한 유권자가 모두 후보자 C를 지지할 경우에는 후보자 C가 60표를 얻어 당선된다. 후보자 A를 지지한 유권자가 모두 후보자 C를 지지하고, 후보자 D를 지지한 유권자가 모두 후보자 B를 지지할 경우에는 후보자 C와 B의 득표수가 동수이므로 그중 연장자인 C가 당선된다. 따라서 후보자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t 시기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데, 최다 득표자는 각각 30표를 얻은 후보자 B와 후보자 C이다. 최다 득표자가 2인인 경우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후보자 B보다 연장자인 후보자 C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③ t 시기에 당선인은 후보자 C이기 때문에 t 시기와 t+1 시기의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t+1 시기의 당선인은 후보자 B가 된다. 후보자 A는 20표, 후보자 D는 10표로 t+1 시기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60표일 것이다.

④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한 번의 선거로

대표자가 결정되는 반면에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절대다수 대표제인 결선 투표제로 일정 득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지 않다.

⑤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반면에,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절대다수 대표제로 과반수 득표와 같이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따라서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02 선거 제도 분석

**문제 분석**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300명으로 현행 의회 의원 선거 제도와 최근 선거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의 2배이므로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수는 200개, 지역구 의석수는 200석, 비례 대표 의석수는 100석임을 알 수 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점에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만 50개로 축소하여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구당 4명을 선출하는 단순(상대) 다수 대표 제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면 특정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최대 50석이다. 한편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최대 100석이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최대 150석이므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ㄴ. 〈2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인 절대다수 대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3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가 동수가 되어야 하므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각각 150석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하더라도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총의석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76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②

## 01 정치 과정 이해

**문제 분석** A는 투입, B는 산출, C는 환류이다.

**정답 찾기** ① 투입에서 정치 주체는 개인과 집단 모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정책 관련 캠페인 활동, 시위는 투입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환류에서 정책 평가의 주체는 개인, 집단, 국가 모두 포함된다.

④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 기구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한다.

⑤ 투입, 산출, 환류 모두 정치 외적 요소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02 정치 참여 방법 이해

**문제 분석** ◇◇ 학교 신문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사례로 제○○대 국회 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것, 지방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것,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것,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한 것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대 국회 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것과 지방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 또는 환류에 해당한다.

②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방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④ 제○○대 국회 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며,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 03 양당제와 다당제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이다.

**정답 찾기** ㄴ.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많으므로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ㄷ. 양당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다당제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므로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오답 피하기** ㄱ.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많으므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ㄷ.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다당제에 비해 정권 교체가 가능한 두 개 정당이 경쟁하는 양당제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 04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 분석**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② 정당은 의회와 행정부를 대개한다.

**오답 피하기** ① 공직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정당을 반영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⑤ 이익 집단, 정당,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77~80쪽

1 ④	2 ③	3 ③	4 ①	5 ⑤	6 ③
7 ①	8 ②				

## 1 정치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 기획사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사회적 요구를 통하여 압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평가가 이루어진 정치 과정의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④ △△ 시민 단체와 달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표 예매와 압표 거래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하며, 정치 과정에서 외적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② 청원은 집단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니다.

③ 법률을 개정하여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⑤ 산출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공연 전문가의 압표 관련 법률 개정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표 예매와 압표 거래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압표 관련 법률 개정 관련 청원에 대한 산출로 볼 수 없다.

## 2 정치 참여 방법 이해

**문제 분석** 세상을 움직이는 사회 참여 활동 프로젝트에서 학교 근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 해결을 주제로 갑, 을, 병, 정은 각각 자신이 실천한 정치 참여 방법을 설명하였다.

**정답 찾기** ㄴ. 정이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 것은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ㄷ. 오프라인으로 교통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을에 비해 시청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정치에 참여한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오답 피하기** ㄱ.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적으로 시청의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한 행위로 공무 담임권 행사를 통한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함께 교통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은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하며,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의견을 표출한 정은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 3 정당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정당은 다양한 형태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정당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상반되어 충돌할 경우 이익을 조절하면서 타협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정당은 이 때 아래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찾기** ③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만든 정책안을 정책 결정 기관에 전달한다는 것을 통해 정당이 국민과 의회 또는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정부 감시를 통해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당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②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당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④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당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⑤ 정치 교육과 정당 활동을 통하여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는 기능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당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 4 정당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 (다)는 일당제이다.

**정답 찾기** ㄱ. 다당제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므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양당제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ㄴ.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는 다수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오답 피하기** ㄷ.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는 일당제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유



리하다.

ㄹ. 복수 정당제인 양당제와 다당제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 5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 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답 찾기** ⑤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정치적 총원 기능을 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특수한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는다.

③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④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6 정치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게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로 △△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된 정치 과정의 사례이다.

**정답 찾기** ㄴ. 게임 사용자, □□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ㄷ. 국회, ○○부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ㄱ. 사용자 일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시위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ㄹ. 정치 과정에서 △△ 법률 시행령 개정은 산출에 해당하고, 게임 사용자, 게임 업체 등이 △△ 법률 시행령 개정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환류에 해당한다.

## 7 언론의 이해

**문제 분석** 진로 희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ㄱ. 갑은 방송국 PD, 을은 신문사의 정치부 기자를 희망하였다. 이는 언론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문제를 다뤄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직업이다.

ㄴ. 정책 전문가가 되어 정치 문제를 제보나 투고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내용을 통해 병은 언론을 활용하여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는 정치 참여 방법을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갑, 을, 병의 발표 내용에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치 참여 방법이 포함되었다.

ㄹ.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으로, 갑, 을, 병 모두 정당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8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② 정당은 정권 획득을 통해 정강을 실현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은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③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④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이다.



## 기출 플러스

본문 81쪽

01 ②

02 ①

## 01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② 이익 집단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는 것은 국회이다.

③ 시민 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지방 자치 단체를 예로 들 수 있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⑤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02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갈 수 있으며, (나)에는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구별되는 정당만의 특징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정당은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②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교섭 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국회 의원이 구성할 수 있다.

③ 시민 단체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지방 자치 단체를 예로 들 수 있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만 공직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 09 민법의 기초

수능 기본 문제

본문 84~85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8 ④

## 0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이해

**문제 분석**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A는 공법이고, 개인들 상호 간의 일상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B는 사법이다.

**정답 찾기** ㄱ.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을 소송법이라고 하는데, 소송법은 국가 기관인 법원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공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ㄴ. 민법은 사법, 형법은 공법에 해당하는 법이다.

ㄷ. 개인 간에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인들 상호 간의 일상생활 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 02 민법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 관계, 가족 관계를 규율하며, 총칙을 포함하여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찾기** ㄱ. 개인 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ㄷ. 혼인을 통해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이혼을 통해 혼인이 해소되므로 갑과 을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오답 피하기** ㄴ.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입양은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ㄷ. 손해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므로 손해 배상 청구는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다.

## 03 민법의 기본 원칙의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공정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계약 당사자의 선택, 계약 방식의 선택 모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②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수정·보완한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 04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정답 찾기** ㄷ.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사유 재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ㄱ.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ㄴ.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05 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민법 제390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민법 제750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한 것이다. 두 조항 모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나타난다.

**정답 찾기**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④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 06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환경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되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 07 민법의 기본 원칙의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수정·보완 원칙인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며, 과실 책임의 원칙의 수정·보완 원칙인 C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준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⑤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도 인정된다.

## 08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공정 거래 위원회는 ○○ 회사와 하도급 업체 간에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이 있었으며, 이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6~88쪽

1 ④

2 ⑤

3 ②

4 ④

5 ②

6 ④

## 1 민법의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으로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정답 찾기** ㄱ. 헌법과 형법은 공법의 사례이다.

ㄷ. 민법이 규율하는 재산 관계의 내용에는 계약의 유형과 내용,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손해 배상 등이 포함된다.

ㄴ. 이혼과 자녀 양육은 모두 민법이 규율하는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ㄴ. 국가 기관인 검사가 감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법의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 2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 정책 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A)에 따른 것이다.

**정답 찾기**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 3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이 '고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답 찾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 4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시가 개발하는 표준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급여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답 찾기**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 5 민법의 기본 원칙의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과실 책임의 원칙,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C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ㄴ. 현대 사회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오답 피하기** ㄴ.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ㄷ.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은 모두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6 민법의 기본 원칙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B는 계약 자유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 오염, 기업의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ㄴ.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병존하며 적용된다.

**오답 피하기** ㄷ.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01 ③

02 ④

**01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공익을 우선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갑의 답변에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④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02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압표 거래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러한 계약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10 재산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94~95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③

07 ②

08 ④

**01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찾기** ㄷ.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본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미성년자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ㄴ. 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모두는 각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02 계약의 성립 요건의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갑, 을, 병이고, (가)에는 옳지 않은 발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ㄱ.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ㄴ.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갑, 을, 병이다.

ㄷ. 계약의 내용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3 미성년자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미성년자가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계약에 해당한다.

ㄷ.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는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ㄴ. 용돈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ㄱ.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해당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04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이다.

**정답 찾기** ⑤ 미성년자가 동의서를 위조한 후 거래 상대방이 이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동의서를 위조한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동의서를 위조한 후 거래 상대방이 이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동의서를 위조한 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화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동의서를 위조한 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05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의 이해

**문제 분석**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 능력,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 관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찾기** ② 가해자가 일부러 한 행동은 고의에 의한 행동이고, 실수로 한 행동은 과실에 의한 행동이다.

**오답 피하기** ①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④ 영유아는 책임 능력이 없지만,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다.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⑤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

## 06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질문자가 일을 하다가 음식을 손님에게 쏟았는데, 이 경우에는 종업원 개인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면 손님은 갑

에게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면 손님은 사용자인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면 손님은 사용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손님은 사용자인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07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ㄴ.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으나, 갑이 책임 무능력자라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갑의 부모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고, 갑이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갑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08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건물의 점유자이고, 을은 건물의 소유자이다. PC방 창틀은 공작물에 해당하고 점유자는 갑, 소유자는 을이다. 공작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 찾기** ㄱ. 공작물 점유자인 갑이 창틀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공작물 점유자인 갑이 창틀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병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공작물의 점유자인 갑이 창틀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은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공작물의 점유자인 갑이 창틀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은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1 ④      2 ④      3 ①      4 ④      5 ④      6 ⑤  
7 ④      8 ④

## 1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가)에서 갑의 청약, (나)에서 을의 승낙이 나타났다.

**정답 찾기** ㄱ. (가)에서 갑은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였다.

ㄴ. (나)에서 갑의 청약에 대한 을의 승낙이 있었다. 따라서 (나)에서 갑과 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

ㄷ. 계약 성립으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며,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ㄹ. (나)에서 갑과 을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었다.

## 2 미성년자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 병, 정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정답 찾기** ④ 철회권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갖는 권리이다. 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고, 정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A가 알았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갑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갑과 정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과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과 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의 부모와 정은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A가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을의 부모, 병의 부모뿐이다.

## 3 채무 불이행의 이해

**문제 분석**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대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선 의무를 지게 된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사례에서 갑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주장한 것이다.

**정답 찾기** ㄱ. 임대인 을이 임차인 갑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다른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는 '채무 불이행'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을이 배상해야 하는 400만 원은 제거한 간판의 재 설치 비용만을 산정한 것은 아니다. 간판 설치 행위로 발생한 매출 하락분도 산정된 것이다.

ㄷ. ○○ 지방 법원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4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 A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갑의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불법 행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가)와 (다)의 경우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고, (나)의 경우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

**정답 찾기** ㄴ. (나)의 경우와 달리 (다)의 경우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A는 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ㄷ.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의 경우에만 A는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가)의 경우에 A는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가), (다)의 경우 모두 A가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5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이해

**문제 분석** 사례는 종업원 을이 자신의 업무에 소홀하여 손님인 A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사용자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ㄷ. 종업원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면 A는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ㄷ. 종업원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면 을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ㄴ. 사용자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을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6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의 이해

**문제 분석** 노래방 계단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갑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갑의 손해 배상 요구에 A, B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과 관련이 있는 사례이다.

**정답 찾기** ㄷ. 노래방 주인인 A가 계단의 점유자라면 A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ㄷ. 노래방 주인인 A가 계단의 점유자라도 A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건물의 소유자인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ㄱ. 계단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B라면 갑은 A가 아닌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ㄴ. 계단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B라면 B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 7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 및 긴급 피난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사례이다.

**정답 찾기** ㄱ. 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병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ㄴ. 갑이 병의 개를 발로 찬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면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ㄷ. D는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A, B, C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만약 C가 사건 당시 A, B가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사례 1>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례 2>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다. <사례 1>에서 을과 달리 갑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을의 법정 감독 의무자와 달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례 2>에서는 정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면 병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에 옳지 않은 법적 판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ㄱ. A는 을의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B는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B는 병과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ㄴ. A는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기출 플러스

본문 100~101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②

## 01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E가 배달 중 A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반려견이 E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도자기가 파손된 사건은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찾기** ③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E를 물어 다치게 하였으므로 B는 동물 점유자로서 E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②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야 A의 부모는 C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인 D가 종업원인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E는 C와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02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병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은 을의 직원인 정의 불법 행위와 관련되므로 을의 사용자 배상 책임 문제와 관련되고, 무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과 관련된다.

**정답 찾기** ③ 을의 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작물의 소유자인 갑은 무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정은 을의 직원이므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동물의 점유자인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은 병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03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을이 배수관에 걸려 다리가 부러진 것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과 관련이 있고, 갑의 직원 병이 을을 데리고 병

원에 가던 중 사고로 을을 다치게 한 것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돼지들이 무가 소유한 배추밭을 헤집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동물의 점유자 책임과 관련이 있다.

**정답 찾기** ③ 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로서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용자 병은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공작물 점유자인 갑이 배수관으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동물의 점유자인 정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정은 무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 04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미성년자일 때에 부모 동의 없이 을과 100만 원에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병과 80만 원에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정답 찾기** ② 갑의 법정 대리인(친권자)은 A이므로 을은 B에게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을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므로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갑과 병이 체결한 의상 제작 계약은 갑의 청약과 병의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④ 갑은 성년일 때 병과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는 갑과 병의 의상 제작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을이 제작한 의상을 인도받은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11 가족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06~107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④    08 ①

### 01 혼인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혼인을 위해서는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혼인 의사 합치, 혼인 가능 연령,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답 찾기** ④ 18세는 부모가 동의하면 혼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혼인도 계약이므로 혼인을 통해 부부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②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는다.

③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해당 혼인은 효력이 없다.

⑤ 중혼은 법률혼만 해당된다.

### 02 법률혼과 사실혼의 이해

**문제 분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A는 사실혼이고,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인 B는 법률혼이다.

**정답 찾기** ④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의 남녀 간에는 상속권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② 법률혼과 사실혼은 모두 남녀 간에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갖는다.

③ 법률혼과 사실혼은 모두 남녀 간에 동거 · 협조 · 부양의 의무가 있다.

⑤ 사실혼과 달리 법률혼은 법에 정해진 이혼 절차를 거쳐야 그 관계가 해소된다.

### 03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해

**문제 분석** 이혼의 유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병과 정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정답 찾기** ㄱ.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녀 A는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친권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ㄴ.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해당 자녀는 각각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ㄴ. 이혼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04 이혼의 효과 이해

**문제 분석**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을 통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와 양육할 부 또는 모를 정해야 한다.

**정답 찾기** ㄱ. 이혼하게 되면 이혼 전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ㄴ. 혼인하면 부부간에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혼 후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한다.

ㄷ. 이혼 후에도 함께 살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ㄹ.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05 친자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인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에는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친양자, 친양자가 아닌 양자가 있다.

**정답 찾기** ⑤ 친양자는 입양 시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부모가 법률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가 된다.

②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③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입양 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④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갖는다.

## 06 친권의 이해

**문제 분석**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정답 찾기** ㄱ. 친권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ㄴ. 친권의 내용에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이 있다.

ㄷ.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ㄹ. 친권은 상실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다.

## 07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고, 유언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정답 찾기** ㄱ.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ㄴ. 상속의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

ㄷ.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오답 피하기** ㄹ.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 08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으나, 자녀는 상속권이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상속권이 없다.

**정답 찾기** ㄱ. 갑이 사망하면 상속권자는 자녀 A뿐이다.

ㄴ. 을이 사망하면 상속권자는 배우자 병, 자녀 A, 자녀 C, 친양자로 입양한 B이다.

**오답 피하기** ㄷ. 병이 사망하면 상속권자는 배우자 을, 자녀 B, 자녀 C이다.

ㄹ. 정이 사망하면 상속권자가 없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08~111쪽			
1 ④	2 ④	3 ⑤	4 ③	5 ③	6 ①	
7 ③	8 ⑤					

## 1 법률혼과 사실혼의 이해

**문제 분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사실혼 당사자들 간에 갖는다. 그러나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찾기** ㄱ.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ㄴ.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다.

ㄷ.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오답 피하기** ㄹ. 사실혼에서도 양 당사자들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존재한다.

## 2 혼인과 이혼의 이해

**문제 분석**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일상 가사 채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나)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ㄴ. 17세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혼인할 수 없다.

ㄷ.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ㄱ. 혼인을 하면 부부 별산제가 적용된다.

ㄷ.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모두 유책 배우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문 중 일부이고, (나)는 협의상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의 일부이다.

**정답 찾기** ㄴ. 협의상 이혼 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ㄷ.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ㄹ.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ㄱ.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친자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 갑은 혼인 외 출생자이고, 혼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낳은 자녀 을은 혼인 중 출생자이다. 병은 친양자이며, 정은 친양자가 아닌 양자이다.

**정답 찾기** ③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입양 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된다.

**오답 피하기** 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성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② 자녀 갑도 친생자이다. 다만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고 혼인 외 출생자이다.

④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 절차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⑤ 친양자가 아닌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 5 친자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의 이혼 후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A와 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나, A와 을과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갑과 정이 사실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 C는 혼인 외 출생자였다가 갑과 정이 혼인 신고 후에 혼인 중 출생자가 된다.

**정답 찾기** ③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인 갑과 A와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오답 피하기** ① 혼인 신고를 한 후 낳은 자녀 A는 친생자(혼인 중 출생자)이고, 사실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 C도 친생자(혼인 외 출생자)이다.

②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④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산다고 해도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실혼 상태에서도 인지 절차 등을 통해 친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 6 친권의 이해

**문제 분석**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여러 권리와 의무인데, 사례에서와 같은 청구 절차를 거쳐 상실될 수도 있다.

**정답 찾기** ①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친권은 이혼 시 합의가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의해 그 행사자가 지정될 수도 있다.

③ 친권은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④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이다.

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7 상속과 유언의 이해

**문제 분석**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대로 나누어지고, 유언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사례에서는 갑의 유언장 효력 여부에 따라 갑의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진다. 빚도 상속이 되므로 만약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갑의 상속 재산은 9억 원이다.

**정답 찾기** ㄴ.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배우자 을, 자녀 A, B, C가 각각 1.5 : 1 : 1 : 1의 비로 상속받으므로 각각의 상속액은 3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이다. 따라서 B의 상속액은 을보다 1억 원이 적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을은 유류분을 제외하고 갑의 재산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을, A, B, C가 1.5 : 1 : 1 : 1의 비로 상속받으므로 ㉠은 0점이고,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인 A, B, C 3명이므로 ㉡은 0점이다.

ㄹ.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빚을 제외하고 9억 원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8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는 정, A, D, F이고,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는 무, A, B, E이다.

**정답 찾기** ⑤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와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에 모두 A가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①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미성년자에

대해 양육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갑이 D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D와 친생부모인 병과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③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④ 을과 무가 혼인한 상태에서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므로 B의 성과 본은 을 또는 무와 같아진다.

## 기출 플러스

본문 112~113쪽

01 ①

02 ①

03 ④

04 ④

### 01 상속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을이 병으로부터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총 500만 원을 빌린 것은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며,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한편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 신고를 한 때 발생하는데, 갑과 을의 경우에는 아직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답 찾기** ①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갑과 을은 아직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② 을의 사망 시 친생자인 A와 친양자인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③ 을이 사망했다라고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이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④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갑과 을의 자녀 A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친양자로 갑과 을에게 입양된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 02 상속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갑의 친모인 A는 B와 법률혼을 하였지만, B는 갑을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 갑은 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 병은 갑과 혼인한 을이 갑과 혼인하기 전에 낳은 자녀이다. A의 사망 시 상속인은 B와 갑이고, 병의 사망 시 상속인은 갑과 을이다.

**정답 찾기** ① 갑이 병(을과 정의 혼인 중 출생자)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지만, 당시에 갑과 을은 법률혼 상태였으므로 을과 병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또한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병의 친권자가 갑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로 인해 을과 병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병은 갑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병의 사망으로 정은 병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③ A와 B가 법률혼을 하였지만 B가 갑을 양자로 입양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갑의 사망으로 B가 갑의 상속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과 을의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병이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갑이 병을 친양자로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⑤ 병의 사고 당시 병에 대한 친권자는 갑이다.

### 03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병과 정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였으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한편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찾기** ④ 병의 사망 시 친생자인 C는 병의 상속인이지만 병이 A,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A와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사망 시 상속인은 배우자 을, 친생자 A, 친양자 B이다.

② 병과 정은 협의상 이혼을 했으므로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혼 신고를 한 후 정은 C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③ 병의 사망 시, B와 C 모두 A의 친족이다.

⑤ 을은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C의 사망 시, 정은 C의 상속인이다.

### 04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 분석** 병은 19세인 A를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B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사망한 것이 된다.

**정답 찾기** ④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갑, 을, 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갑이 A를 홀로 양육하므로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갑이 아닌 을에게 인정된다.

② 병의 사망 당시 병이 가진 재산은 병과 B가 상속받으며, B는 미성년자이므로 병이 친권자라면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③ A는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지만, 갑이 B를 입양했는지 여부를 모르므로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12 형법의 이해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18~119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③    08 ①

### 01 형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 (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다.

**정답 찾기** ②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형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여 법익과 사회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범죄 행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③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모두 형법을 통한 처벌은 국가만이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④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형벌 부과를 통해 법익과 사회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의 처벌을 전제한다.

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모두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 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 02 죄형 법정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죄형 법정주의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하였다.

**정답 찾기** ④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수사의 편의성보다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죄형 법정주의와 형사 절차의 신속성은 관련이 적다.

③ 죄형 법정주의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은 아니다.

⑤ 죄형 법정주의는 재판에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 03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갑국 A법 제12조는 도로 운행 중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여기서 '불편함을 초래함'이라는



표현이 매우 불명확하다. 을국 B법 부칙 제2조는 일부 조항에 대해 공포일 1년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규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정답 찾기** ② 갑국 A법 제12조에서 '불편함을 초래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을국 B법 부칙 제2조는 공포일 1년 전의 행위부터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답 피하기** ①, 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을국 B법 부칙 제2조에서 범죄와 형벌 간의 경중을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갑국 A법 제12조에서 소급효를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을국 B법은 성문 법률이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갑국 A법 제12조와 을국 B법 부칙 제2조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4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적정성의 원칙, (나)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②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관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즉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물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형벌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두 원칙 모두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05 위법성 조각 사유 이해

**문제 분석**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전체 범죄사실에 비추어 위법하며, 행위자에게 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를 묻고 있다.

**정답 찾기** 병: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자동차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근처 가게의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의 사례이다.

정: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소매치기범을 발견하고, 그를 추격하여 체포한 후 즉시 경찰에 넘긴 경우는 현행범 체포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의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갑: 멧돼지를 잡으려고 엽총을 쏘았는데, 지나가던 등산객이 맞아 다친 경우는 고의는 아니지만 등산객을 다치게 했다.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을: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한 경우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 06 범죄와 형벌의 이해

**문제 분석**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인 보안 처분이 있다.

**정답 찾기** ② 자구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형사 미성년자의 절도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심신 미약자의 상해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형벌의 감경 사유는 된다.

④ 징역과 금고는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징역은 정해진 노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금고는 정해진 노역의 의무가 없다.

⑤ 보안 처분은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서 판사가 판결의 형식으로 내린다.

## 07 범죄와 형벌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답 찾기** ③ 갑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징역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②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 처분으로서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도로 교통법은 비록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⑤ 갑의 음주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은 갑에게 징역이라는 형벌과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보안 처분을 함께 선고하였다.

## 08 범죄와 형벌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을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았다. 병은 징역 1년에 자격 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정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을 부과받았다. 징역과 자격 정지는 형벌이지만, 치료 감호와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ㄱ.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노역에 종사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ㄴ.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은 보안 처분이다. 을이 선고받은 치료 감호는 심신 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여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으로서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오답 피하기** ㄷ. 병이 받은 징역은 자유형, 자격 정지는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ㄹ. 사회봉사 명령은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 활동을 하는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20~123쪽

1 ③	2 ①	3 ②	4 ②	5 ③	6 ④
7 ⑤	8 ④				

## 1 죄형 법정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죄형 법정주의이다.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정답 찾기** ③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병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병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했더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어떤 행위에 적용할 법규가 없다고 하여 비슷한 법규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 행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호화 혼수’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엄하게 처벌’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⑤ 일반적으로 옥설보다 폭행의 범죄 행위가 더 중한데도 옥설에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 2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재판소는 음란물 제작에서 ‘제작’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범죄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는 명확성의 원칙, (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①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와 그 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 오답 피하기** ② 적절한 법률 조항이 없을 경우 비슷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 ③ 원칙적으로 사후 입법을 통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④ 전통적인 관습법이나 불문법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 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와 형벌이 명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에 비례하는 형벌 부과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 3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갑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 위조죄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갑의 행위가 해당 법률 조항의 증거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법률 조항이 없는데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밑줄 친 'A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③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와 그 행위에 따른 형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④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뿐이고, 전통적인 관습이나 불문(不文)의 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⑤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4 범죄와 형벌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형법 제105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을 모욕'한다는 것의 의미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ㄱ.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 규범, 즉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공법이다.

ㄴ. 자격 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명예형이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

상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이다.

**오답 피하기** ㄴ. 징역은 정해진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 금고는 정해진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는 정해진 노역의 부과 여부로 구분된다.

ㄷ. 헌법 재판소는 형법 제105조의 '대한민국을 모욕'이라는 규정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률 규정의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은 갑, 을, 병의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갑이 A에게 전화를 하던 중 소리를 질러 A를 놀라게 한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을이 심야에 강도의 공격에 대항하다가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병이 납치한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폭력배의 협박에 할 수 없이 법원의 재판에서 위증한 행위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ㄱ.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갑이 전화로 소리를 지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ㄴ. 병은 법원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지만 그 위증의 이유가 납치한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폭력배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즉 병에게 위증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ㄴ. 을이 심야에 강도의 공격에 대항하다가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 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책임이 존재해야 한다.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정답 찾기** ④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하는 강도를 체포하여 즉시 경찰에 넘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위법 행위를 이유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다.

② 책임의 성립 여부는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③ 자신의 돈을 갇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붙잡다가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⑤ 20세의 대학생이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노트북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으며 책임도 존재하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 7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카드 A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로 책임 조각 사례에 해당하고, 카드 B는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카드 C의 사례는 범죄가 성립하고, 카드 D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례이다. 카드 E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사례이고, 카드 F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카드 G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조각 사례이다. 따라서 카드 A~G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카드 A	카드 B	카드 C	카드 D	카드 E	카드 F	카드 G
3점	1점	0점	2점	2점	1점	3점

**정답 찾기** ⑤ 갑이 카드 A, 카드 B, 카드 D를 뽑았다면 6점이다. 갑이 을보다 1점이 많아 승자가 되었으므로 을은 5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이 뽑을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카드 C, 카드 E, 카드 G로 1개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갑, 을 모두 3점짜리 카드 1장, 2점짜리 카드 1장, 1점짜리 카드 1장을 뽑았다면 각각 6점으로 무승부가 된다.

② 카드 3장의 조합(카드 B, 카드 C, 카드 F)으로 획득할 수 있는 최소 점수는 2점이다.

③ 책임 조각 사례의 카드는 카드 A와 카드 G, 위법성 조각 사례의 카드는 카드 D와 카드 E로서 각각 2장으로 같다.

④ 갑이 카드 B, 카드 C, 카드 D를 뽑았다면 갑은 3점을 얻는다. 을이 카드 A, 카드 E, 카드 G를 뽑았다면 을은 8점을 얻으므로 최대 5점 차이로 갑을 이길 수 있다.

## 8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벌금, 을은 금고, 병은 구류, 정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무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보안 처분의 하나인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정답 찾기** ④ 정이 선고받은 징역은 정해진 노역 의무가 있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연공원법은 위반할 경우 범죄임을 명시하였고, 형벌도 정해져 있으므로 형벌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② 을이 선고받은 금고는 정해진 노역 의무가 없는 자유형이다.

③ 병이 선고받은 구류는 형벌 중에서 자유형에 해당한다.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은 보안 처분이다.

⑤ 무가 무죄 선고와 동시에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것은 행위 당시 무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무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 범죄가 성립되므로 유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 기출 플러스

본문 124쪽

01 ④

02 ③

## 01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A국 형법 제○○조, 제□□조, 제△△조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고 있다. 제○○조에서는 ‘인생을 낭비한 자’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 제△△조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형벌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는데, 제□□조에서는 범죄의 강도가 훨씬 약한 모욕죄에 대해 형벌을 무기 징역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경중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정답 찾기** 나. A국 형법 제○○조는 ‘인생을 낭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생을 낭비한’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징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A국 형법 제○○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르. 제□□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죄의 형벌이 모욕죄의 형벌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답 피하기** 가. A국 형법은 성문의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제□□조는 감이 해당 행위를 하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제□□조를 적용하여 감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02 죄형 법정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A국 의회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을 2020년 6월에 제정하였고, 2021년 6월에 형벌 규정이 개정되었고, 2022년 7월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갑, 을, 병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범죄에 해당하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행위 당시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③ 을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행위를 한 시기는 2021년 12월로 행위 당시 △△법 제14조 제1항은 형벌 규정이 징역 2년 이하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을에게 행위 당시의 △△법 제14조 제1항이 아닌 개정 전의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은 허위 제작물의 제작과 유포를 막아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진다.

② 갑은 2020년 8월에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행위 당시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는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 형벌이다.

④ 병은 2022년 10월에 △△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법 제14조 제2항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형벌은 몰수이다.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29~130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②

## 0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혔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되고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갑을 대면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영장이 필요하지만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②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기소되어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부터 가진다.

④ 을이 갑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이미 갑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수사는 개시되었다.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는 고소뿐만 아니라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등에 의해서도 개시된다.

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 0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고, 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답 찾기** ㄱ. 갑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이고, 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이다.

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가 가진다.

**오답 피하기** 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서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ㄷ. 검사는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갑을 대면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니다. 을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 03 적법 절차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 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지 없이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을 체포하여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제시된 판례는 공통적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②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피의자나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수사나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 04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혐의 없음'과 '죄가 안 됨'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고, '공소권 없음'과 '기소 유예'는 여러 사정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이다.

**정답 찾기** ① 형사 미성년자의 형법 위반 행위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재심 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가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혐의 없음'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수사 종결을 의미하므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재심 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

③ '공소권 없음'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기소 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으로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구속 적부심 제도는 기소 전에 활용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

## 05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엘리베이터 탑승 지연 문제로 을이 갑을 폭행하여 상해

를 입혔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을은 상해 혐의의 피의자가 된다. 검사가 을을 기소하면 을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답 찾기** ② 형사 재판이 열릴 경우 검사와 을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갑은 피해자이므로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에 의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구속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가 아닌 판사에게 있다.

④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수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⑤ 구속 적부심 제도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구속된 피의자가 활용될 수 있다.

## 06 형의 선고 유형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무죄 선고, (나)는 선고 유예, (다)는 집행 유예, (라)는 실형 선고이다.

**정답 찾기** ④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검사의 지휘하에 형을 집행받는다.

**오답 피하기** ① 벌금 선고는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된 것이므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② 선고 유예를 받았을 경우 죄를 짓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죄를 짓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집행 유예이다.

③ 집행 유예는 유죄의 선고에 내려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를 받을 경우에 석방된다.

## 07 형사상 인권 보장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갑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금된 부분에 대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범죄 혐의가 TV 뉴스에 방송됨에 따라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갑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 의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하면 해당 사건의 무죄 재판서를 1년 동안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게재한다. 갑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TV 뉴스에 보도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고,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배상 명령 제도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피고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다.

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신체에 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갑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 08 형사상 인권 보장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상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질문자는 A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 찾기** ② A는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므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법원에서 구속이 위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보석 제도는 법원에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이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다. A는 이미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하여 구속된 상태이다.

④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초범 등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A는 아직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신분이므로 선고 유예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A는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신분이므로 집행 유예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1 ③      2 ⑤      3 ①      4 ③      5 ②      6 ④  
7 ①      8 ⑤

## 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을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통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정답 찾기** ㄴ. 갑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기소된 이후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ㄷ.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갑의 폭행 혐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다. 갑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통해 석방되었다. 가석방 제도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누우침이 크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ㄹ.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 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가 갑을 기소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고, 갑의 변호인은 갑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갑은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정답 찾기** 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오답 피하기** ①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 영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체포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

②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 측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이다.

③ 심신 상실 상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④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 3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었으며, 재판 도중 석방되었다.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정답 찾기** ① 검사는 갑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판사는 갑을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구속되기 전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쳤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갑은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③ 가석방 제도는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이 성실히 복역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크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갑은 재판 중에 석방되었으므로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갑은 재판 도중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므로 보석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④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사뿐만 아니라 갑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집행 유예가 확정될 경우 갑은 2년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년의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는다.

## 4 형사상 인권 보장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을은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정답 찾기** ㄴ. 피의자, 피고인 모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ㄷ. 피의자, 피고인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오답 피하기** ㄱ. 가석방 제도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태도 등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갑은 피의자이고, 을은 피고인이므로 가석방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ㄹ.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 5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의 일부이고, (나)는 판사의 판결문 일부이다.

**정답 찾기** ②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의해 구속된 갑은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에 의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청구한다고 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나)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나)에 의해 갑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따라서 (가)의 발부 주체와 (나)의 작성 주체는 모두 판사이다.

## 6 소년 사건 처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이다. 을은 14세이므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갑과 을은 모두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찾기** ④ 갑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 법원의 피고인이 될 수 없다. 을은 14세로서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둘 다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할 경우 형사 법원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는 갑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다.

② 을은 14세로서 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경찰은 수사를 한 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할 대상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갑이다.

③ 갑과 을은 모두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의 심판을 받을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갑은 14세 미만자로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없다. 을은 14세로서 범죄 소년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한 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검사는 을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

## 07 형사상 인권 보장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았으므로 무죄 선고를 받았을 것이다. 을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

**정답 찾기** ①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받았으므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을은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징역 1년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2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선고 유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③ 병은 징역 10년을 집행받고 있던 중에 누우침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기 만료 2년 전에 석방된 것이므로 가석방 제도에 의해 석방된 것이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었을 것이다. 병은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 중에 가석방되었으므로 징역 10년 형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⑤ 갑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무죄 재판서를 게재하는 방식의 명예 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08 형사상 인권 보장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나)는 기소, (다)는 재판, (라)는 선고이다.

**정답 찾기** ⑤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범죄에 따른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을은 상해죄의 피해자이므로 법원에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갑에게 배상 명령을 내려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에 의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청구한다고 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②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갑을 기소하였다고 해서 갑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갑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나) 이후 갑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계속 적용된다.

③ 갑은 기소된 이후에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기소 전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재판에서 재판장이 갑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01 ② 02 ⑤ 03 ⑤ 04 ⑤

## 0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정답 찾기** ②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전에 청구할 수 있다. 기소 후 공판 중에는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갑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손된 차량 유리창과 같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집행 유예는 형이 확정된 후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⑤ 배상 명령은 가해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 0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절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갑은 1심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은 1심 법원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고, 정은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답 찾기** ⑤ 법원은 집행 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 관찰과 같은 보안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선고 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심신 상실자가 아니므로 법원은 을에게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④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된다.

## 03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은 지하철에서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답 찾기** ⑤ 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동안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② 배상 명령은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배상 명령 절차와는 관계없다.

③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징역은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이다.

## 04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사기죄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식당 주인 A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갑을 찾으려다가 지나가던 을을 갑으로 오인하여 끌고 오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A를 기소 유예 처분하였다. 을은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정답 찾기** ⑤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갑이 항소를 포기하였더라도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2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될 것이므로 갑은 아직 유죄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을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자구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는 A의 행위에 대해 자구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③ 갑은 피의자 신분인 기소 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한다.

④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 유예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14 근로자의 권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39~140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④

## 01 사회법의 등장 배경 이해

**문제 분석** A법은 사회법이다.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법이나 사법만 존재하던 법 영역에 새롭게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찾기** ④ 사회법의 등장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인 사법적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②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사회법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③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법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⑤ 사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도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방어하려는 것은 아니다.

## 02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이해

**문제 분석** A는 근로 기준법, B는 최저 임금법, C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정답 찾기** ② 최저 임금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오답 피하기** ①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③ 근로 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에 반하여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한다.

④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⑤ 근로 기준법에서는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03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세이므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녀야 한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세인 을은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ㄱ. 갑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인 사람이므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녀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ㄴ. 을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을을 고용하려면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ㄷ. 갑과 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갑,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갑, 을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04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의 사례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을의 사례는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받았으므로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ㄴ. 부당 해고를 당한 갑과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을은 각각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을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받았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 해고에도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ㄱ. 정당한 해고의 요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원칙적으로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할 것,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업무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ㄹ. 을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 05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8세이므로 연소 근로자가 아니며, 민법상 미성년자이다. 갑이 맺은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매 근무일 1시간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 도중에 주



어진다.

**정답 찾기** ㄷ. 갑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지 않아도 된다.

ㄹ. 갑은 연소 근로자는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의가 없었다면 갑은 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고, 1시간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지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구두로 맺은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06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7세로 연소 근로자이다. 갑이 맺은 근로 계약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1시간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진다. 하지만 임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2025년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

**정답 찾기** ⑤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갑과 을이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에 합의하였더라도 갑은 법정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녀야 한다. 갑은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취직 인허증을 지니지 않아도 된다.

② 갑은 17세로 연소 근로자이므로 을은 갑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③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이다.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이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07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A 회사에 근무하던 갑, 을은 각각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 병은 해고를 당했다.

**정답 찾기** ㄴ. ○○ 지방 노동 위원회는 을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A 회사는 ○○ 지방 노동 위원회로부터 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ㄷ. 부당 해고를 당한 병은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과 병의 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갑은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으므로 노동조합도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은 업무 시간 중 술에 취해 회사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로 인해 근로 3권 침해에 당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08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에 들어간다.

**정답 찾기** ④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갑에게 징계 해고를 한 경우는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하였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회사의 인사 발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자에게 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징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해고가 불가피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41~143쪽

1 ⑤

2 ⑤

3 ③

4 ⑤

5 ⑤

6 ④

## 1 사회법의 이해

**문제 분석**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가)는 사회법이다.

**정답 찾기** ⑤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법은 노동법에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법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고자 한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법의 등장으로 국가는 근로관계와 같은 법률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③ 노동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보다는 규제하고자 한다.

④ 소규모 자영업자라도 사용자에게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 근로 3권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단결권, B는 단체 교섭권, C는 단체 행동권이다.

**정답 찾기** ㄷ. 단체 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ㄹ.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모두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오답 피하기** ㄱ.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자가 국가에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은 모두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사용자인 병이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갑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며, 을은 18세이다.

**정답 찾기** ㄱ.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30분이고,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이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므로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30분이다. 갑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ㄷ. 연소 근로자도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독자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해

**문제 분석** ○○ 회사로부터 갑은 해고를 통보받았고, 을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 회사로부터 갑은 해고를 통보받았고, 을은 2개월치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 지방 노동 위원회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이지만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면 갑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이기 때문에 매 근무일 18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1일 30분의 연장 근로이고, 을과 A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이다. 갑의 휴게 시간은 1시간, 을의 휴게 시간은 30분이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므로 갑, 을의 휴게 시간은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갑, 을의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계약 내용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 5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답 찾기** ㄴ. 갑이 제기한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 소송이므로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

ㄷ. 행정 소송에서도 재심 판정 중 부당 노동 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 지방 노동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모두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이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ㄹ.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므로 갑은 □□ 행정 법원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신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6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답 찾기** ㄴ.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갑이 속한 노동조합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본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중앙 노동 위원회가 을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사용자인 을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이 참가한 파업은 위법한 파업이므로 이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ㄷ. 중앙 노동 위원회가 을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다면,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갑은 을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기출 플러스

본문 144쪽

01 ⑤

02 ⑤

### 01 근로자의 권리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근로 계약 체결 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15세 미만인 사람이고, 을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병은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이다. 갑, 을, 병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1주일 30시간이다.

**정답 찾기** ⑤ 병은 18세로 법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의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므로 매 근무일 2시간 더 근무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14세인 갑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직 인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을은 중학교를 졸업한 16세인 사람이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을의 주휴일은 월, 화요일이므로 근로 계약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병은 18세이므로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 02 근로자의 권리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부당 해고를 당하였고, 을은 연소 근로자로 근로 시간이 7시간으로 근로 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계약한 상황이다.

**정답 찾기** ⑤ 연소 근로자인 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이므로 매 근무일 2시간씩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용자와 을이 합의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오답 피하기** 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

② ○○ 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경우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시된 내용에는 부당 노동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이며 휴게 시간은 30분으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었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4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 01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국이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법을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정답 찾기** ②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반대하거나 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시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쟁이나 난민 문제와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제시문에서 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⑤ 제시문에서 국가 간 문제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02 국제 관계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이다. (가)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 간에 이념에 기반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나)는 1910년대 제1차 세계 대전이며, (다)는 1980년대 말의 몰타 선언으로, 이를 계기로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라)는 1930~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이다.

**정답 찾기** ⑤ 시기별로 나열하면 (나) 1910년대 제1차 세계 대전 → (라) 1930~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 → (가) 1947년 트루먼 독트린 → (다) 1989년 몰타 선언 순이다.

**오답 피하기** ① 냉전 체제 형성으로 양극 체제가 성립한 이후 냉전 완화 시기에는 제3 세계의 부상,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내부의 다원화 등으로 다극 체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해 다극 체제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었고 몰타 선언으로 종식되었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동맹 체제는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으로 형성되었다. 몰타 선언으로 국

제 사회는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④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920년에 설립되었다.

##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그림은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질문으로 구분한 것이다. A는 조약이고, (가)에 들어갈 질문에 따라 B, C는 각각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⑤ 일반적인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국제 관습법이므로 B가 국제 관습법, C가 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C의 사례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이 B의 사례라면, B는 법의 일반 원칙이고, C는 국제 관습법이다.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에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④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에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0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가치 배분을 강제로 담당할 중앙 정부가 없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오답 피하기**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집단 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 ⑤      2 ②      3 ①      4 ①      5 ④      6 ⑤

## 1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는 국가 간의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⑤ 국가 간의 패권 다툼에 있어 미국이 철군한 이후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아시아인 계입에 참가하도록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외교 사절을 보내는 것에서 보듯 주권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

**오답 피하기** ① 영국이나 중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선과 같은 국제 규범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가 사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이 국제기구의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는 내용은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19세기 초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에 의해 세계 질서가 유지된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④ 제시문에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 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가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고,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인 세력 균형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간 권력 상태가 안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ㄴ. 자유주의적 관점은 침략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ㄷ. 자유주의적 관점은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국제 사회의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다.

## 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갑의 관점은 정의, 보편적인 선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을의 관점은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로 추구하여야 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ㄱ.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국가 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념 대립을 토대로 서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던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오답 피하기**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안보 경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핵심적 행위자를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국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4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법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 관행의 증거인 A는 국제 관습법이다.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B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국제 관습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ㄴ.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명시적 합의 절차 없이도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ㄷ.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 5 조약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는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과 법의 일반 원칙이 나타나 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조약의 사례이며, 금반언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④ 법의 일반 원칙과 달리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국내에 적용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과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⑤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조약의 비준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적 효력을 가



지지는 않는다.

## 6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해

**문제 분석** ㉠은 국제법의 법원 중 하나인 조약, ㉡은 국내법의 하나인 법률이다.

**정답 찾기** ⑤ 조약과 법률 모두 명시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조약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은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조약의 비준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④ 조약은 체결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이다.

## 기출 플러스

본문 152쪽

01 ① 02 ③

## 01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정답 찾기** 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은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재판 당사국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④ 국제 관습법은 법적 결정의 보조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⑤ 국제 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3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0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③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②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강조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④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집단 안보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01 ⑤

02 ⑤

03 ⑤

04 ①

## 01 국제 문제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제시문은 심해 채굴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 준다. 심해 채굴로 인해 나타나는 해양 오염은 국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답 찾기** ⑤ 각국이 희소한 자원인 광물을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 때문에 심해 채굴을 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 해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심해 채굴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는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② 심해 채굴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③ 심해 채굴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는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④ 심해 채굴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 02 국제 문제의 해결 방법 이해

**문제 분석** A는 사법적 해결, B는 외교적 해결이다.

**정답 찾기** ⑤ 국제 비정부 기구의 중재를 통한 국가 간 전쟁 포로 교환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결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법적 해결은 재판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② 외교적 해결은 종교 간 갈등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③ 외교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 모두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④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03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1950년대에는 (가)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고, 1970년대에는 (나)와 같이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북방 외교를 펼쳐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2000년대 이후 (다)와 같이 공공 외교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정부의 공식적 외교

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답 찾기** 다. (다)에서는 공공 외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 외교는 역사, 전통, 문화 등 우리나라의 무형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리. 전통 외교에서는 국가 간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사적·정치적 위협이 나타나는 등 강제나 강압적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공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게 하는 외교 방식을 중시한다.

**오답 피하기** 가.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 연합(UN)에 가입하였고, 그 이후에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 파견에 참여하였다.

나. 1980년대 후반 국제 관계에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는 (나)와 같이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통해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게 되었다.

## 0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이다.

**정답 찾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에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 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하나의 상임 이사국이라도 반대한다면 국제 연합의 회원국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총회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⑤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⑤

2 ④

3 ③

4 ①

## 1 국제 문제 해결 방법 이해

**문제 분석** (가)에는 교황청을 통한 외교적 해결, (나)에는 분쟁 당사국끼리의 외교적 해결이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⑤ (가)에서는 양국 간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나)에서는 교섭을 통해 합의하였으므로 모두 외교적 해결이 이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교황청의 조정으로 양국이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당사국 스스로의 해결이 제3국의 개입보다 중요

함을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분쟁 당사국이 국제 사법 기관의 권한을 인정할 때 따르는 방법은 사법적 해결이다. (나)에는 외교적 해결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에서 양국 간 평화 후조 조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으므로 국제법이 적용되었다.
- ④ (가), (나) 모두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 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이다.

**정답 찾기** ④ 총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체제 내 한 회원국에 대한 침략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침략국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평화 보장 방안이다.

② 국제 연합 현장은 다자간 조약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는 국제 관습법이 있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실질 사항에 대한 표결 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된다.

⑤ 총회는 매년 임기가 2년인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 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은 조약이며, A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나.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국제 연합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상임 이사국은 선출되지 않는다.

다. 을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므로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해 을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오답 피하기** 가. ㉠은 조약이다.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르. A는 안전 보장 이사회로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 연합의 기관이 아니므로 재판의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실질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될 수 없는데, 채택되었으므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 이사국은 없었다.

**오답 피하기** ② 국가만이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 사건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므로 국제기구는 제소할 수 없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판결 집행을 위해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

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

④ 국제 관습법이 조약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01 ④

02 ⑤

**01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문제 분석**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정답 찾기**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만 포함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ㄹ.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의결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은 총회이다.

**0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정답 찾기** ⑤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 15인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오답 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지만,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로 고정되어 있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③ 총회의 결의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만 포함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memo

# 고1~2, 내신 중점

구분	고교 입문		>	기초	>	기본	>	특화	+	단기
국어	고등예비 과정	내 등급은?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 편 + 워크북	기본서 올림포스 —	국어 특화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	단기 특강				
여휘가 독해다! 수능 국어 어휘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	영어 특화 Grammar POWER Reading POWER Listening POWER Voca POWER						
주혜연의 해석공식 논리 구조편										
기초 50일 수학 + 기출 워크북			유형서 올림포스 유형편	영어 특화 고급영어독해 고급 올림포스 고난도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수학			수학 특화 수학의 왕도							
한국사 사회			기본서 개념완성		고등학생을 위한 多답은 한국사 연표					
과학			50일 과학	개념완성 문항편	인공지능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과목	시리즈명	특징	난이도	권장 학년
전 과목	고등예비과정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과목별 단기 완성	<div><div></div></div>	예비 고1
	내 등급은?	고1 첫 학력평가 + 반 배치고사 대비 모의고사	<div><div></div></div>	예비 고1
국/영/수	올림포스	내신과 수능 대비 EBS 대표 국어·수학·영어 기본서	<div><div></div></div>	고1~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 개념 기본서	<div><div></div></div>	고1~2
	단기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유형별 문항 연습	<div><div></div></div>	고1~2
한/사/과	개념완성&개념완성 문항편	개념 한 권 + 문항 한 권으로 끝내는 한국사·탐구 기본서	<div><div></div></div>	고1~2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 편 + 워크북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는 국어 공부의 첫걸음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국어	어휘가 독해다! 수능 국어 어휘	학평·모평·수능 출제 필수 어휘 학습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국어 독해의 원리	내신과 수능 대비 문학·독서(비문학) 특화서	<div><div></div></div>	고1~2
	국어 문법의 원리	필수 개념과 필수 문항의 언어(문법) 특화서	<div><div></div></div>	고1~2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정승익 선생님과 CODE로 이해하는 영어 구문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영어	주혜연의 해석공식 논리 구조편	주혜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유형별 지문 독해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Grammar POWER	구문 분석 트리로 이해하는 영어 문법 특화서	<div><div></div></div>	고1~2
	Reading POWER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영어 독해 특화서	<div><div></div></div>	고1~2
	Listening POWER	유형 연습과 모의고사·수행평가 대비 올인원 듣기 특화서	<div><div></div></div>	고1~2
	Voca POWER	영어 교육과정 필수 어휘와 어원별 어휘 학습	<div><div></div></div>	고1~2
	고급영어독해	영어 독해력을 높이는 영미 문학/비문학 읽기	<div><div></div></div>	고2~3
수학	50일 수학 + 기출 워크북	50일 만에 완성하는 초·중·고 수학의 맥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스타강사 강의, 손글씨 풀이와 함께 고1 수학 개념 정복	<div><div></div></div>	예비 고1~고1
	올림포스 유형편	유형별 반복 학습을 통해 실력 잡는 수학 유형서	<div><div></div></div>	고1~2
	올림포스 고난도	1등급을 위한 고난도 유형 집중 연습	<div><div></div></div>	고1~2
	수학의 왕도	직관적 개념 설명과 세분화된 문항 수록 수학 특화서	<div><div></div></div>	고1~2
한국사	고등학생을 위한 다담은 한국사 연표	연표로 흐름을 잡는 한국사 학습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과학	50일 과학	50일 만에 통합과학의 핵심 개념 완벽 이해	<div><div></div></div>	예비 고1~고1
기타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AI 기초	파이선 프로그래밍, AI 알고리즘에 필요한 수학 개념 학습	<div><div></div></div>	예비 고1~고2

# 고2~N수, 수능 집중

구분	수능 입문	기출/연습	연계 + 연계 보완	고난도	모의고사
국어	윤혜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 기본서 수능 빌드업	윤혜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	수능특강 문학 연계 기출 —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하루 3개 1등급 국어독서	FINAL 실전모의고사
영어	수능특강 Light 강의노트 수능 개념	수능 기출의 미래 —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하루 6개 1등급 영어독해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1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2
수학	수능 감(感)잡기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수능연계완성 3주 특강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Hyper
한국사 사회	수능 스타트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eBook 전용 수능완성R 모의고사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 문항 공략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수능 직전보강 클리어 봉투모의고사
과학					

구분	시리즈명	특징	난이도	영역
수능 입문	윤혜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div><div></div></div>	국어
	수능 빌드업	개념부터 문항까지 한 권으로 시작하는 수능 특화 기본서	<div><div></div></div>	국/수/영
	수능 스타트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분석과 문항 연습	<div><div></div></div>	사/과
	수능 감(感) 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div><div></div></div>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가볍게 시작하는 수능 도전	<div><div></div></div>	영어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div><div></div></div>	전 영역
	윤혜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div><div></div></div>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div><div></div></div>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 없는 실전 훈련을 위한 기출 미니모의고사	<div><div></div></div>	국/수/영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 연계교재 우수문항 풀이 미니모의고사	<div><div></div></div>	국/수/영/사/과
연계 + 연계 보완	수능완성R 모의고사	과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 실전편 수록	<div><div></div></div>	수학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반영한 종합 개념 학습	<div><div></div></div>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div><div></div></div>	국/영
	수능특강 문학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과 연관된 기출문제 학습	<div><div></div></div>	국어
	수능완성	유형·테마 학습 후 실전 모의고사로 문항 연습	<div><div></div></div>	전 영역
고난도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div><div></div></div>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간접연계 대비	<div><div></div></div>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div><div></div></div>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수능 - EBS 연계와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div><div></div></div>	영어
	하루 N개 1등급 국어독서/영어독해	매일 꾸준한 기출문제 학습으로 완성하는 1등급 실력	<div><div></div></div>	국/영
모의고사	수능연계완성 3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1등급 변별 문항 대비	<div><div></div></div>	국/수/영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div><div></div></div>	사회탐구
	수능 등급을 올리는 변별 문항 공략	EBS 선생님이 직접 선별한 고변별 문항 연습	<div><div></div></div>	수/영
	FINAL 실전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중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div><div></div></div>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1/시즌2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연습 모의고사	<div><div></div></div>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고난도 Hyper	고난도 문항까지 국·수·영 논스톱 훈련 모의고사	<div><div></div></div>	국·수·영
	수능 직전보강 클리어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 성적을 끌어올리는 마지막 모의고사	<div><div></div></div>	국/수/영/사/과

**memo**